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0년 3호
SEP 30 2020

발간년월 2020년 9월 30일(2020년 3호)

발행인 장영태 총괄 윤인주 감수이성우 담당 진희권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82-51-797-4766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권두언]	1
북한관광과 평화경제-개별관광 가능성, 한반도관광을 향해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기획 논단]	3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 모색-개념과 이슈,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차장)	
[인터뷰]	12
북한관광 현황과 전망: 북한관광 전문여행사 「고려투어스」 싸이먼 커캐럴 (고려투어스 총괄매니저)	
[북한 알기]	16
북한의 외래관광 역사와 변천 진희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北 리뷰]	18
북한여행 (뤼디거 프랭크)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한반도를 달리다 (모건, 개러스) 황주희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수료)	
[지상 중계]	20
KGFP2020, KMI세션: 해양수산 평화경제	
[뉴스 요약]	26
2020년 3분기 북한 해양수산 소식	



[권두언]

북한관광과 평화경제

- 개별관광 가능성, 한반도관광을 향해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개별관광 제안, 그 이후

연초 우리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북한에 제안했다. 이는 연말에 북한이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철거 통보를 하고 금강산지구를 자체 개발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희망하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합작 형태의 관광개발 사업을 재개하는 대신에 국민 개인의 신청과 대가 지불에 따른 관광활동을 허용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의 여파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가 출입국 경계를 단단히 하면서 국제관광시장은 얼어붙은 상태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정리해보는 북한관광의 현 주소

이번 북한해양수산리뷰는 대북제재 하에서 그나마 남북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고려되고 있는 관광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획 논단'을 통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개별관광 형태를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개별관광 추진 시 가장 유력한 협력국가는 중국인데 남북관광 뿐 아니라 북·중관광 연구에도 일가견이 있는 한국관광공사 김한규 차장의 분석을 담았다. 다음으로 '인터뷰'는 서구권 최대 북한관광여행사인 고려투어스 싸이먼 커캐럴 총괄매니저와의 대화를 실었다. 북한관광의 재개와 북·중관광 및 개별관광, 한반도관광의 전망에 대해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북한 알기'는 북한관광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북한 외래관광의 역사와 변천을 정리해보았다. '北 리뷰' 역시 북한관광을 소재로 한 흥미로운 책을 선정했다. '북한 여행'은 북한경제 및 동아시아 경제 발전 전문가이자 북한을 수차례 여행하면서 단체관광을 인솔해 온 루디거 프랭크 교수의 책이다. 한국인이 경험하지 못한 북한관광의 속살이 알찬 정보와 다양한 에피소드로 꽉 차 있다. '한반도를 달리다'는 오토바이를 타고 북한에서 DMZ를 건너 한국으로 넘어온 부부의 여행기이다. 개별관광에서 제안하는 외국인 중심의 한반도관광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두 책 모두, 북한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북한관광과 한반도관광을 생각해볼 수 있게 초대한다.

연안에서부터 시작하는 평화경제

사실 그동안의 남북관광은 ‘한국 국민이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평화경제를 강조하는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이제 남북관광은 평화관광, 또는 한반도관광 등으로 확장된 개념 및 새로운 명칭을 필요로 한다. ‘평화관광’이라 함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주장하는 평화경제의 일환으로, ‘평화를 위한 관광, 관광을 위한 평화, 그리고 양자의 선순환’이라 하겠다. ‘한반도관광’은 금강산과 같은 접경의 시범사업 공간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두고 관광시장의 흐름을 트는 것을 말한다. 그 흐름의 장애물이 되는 군사분계선이나 DMZ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관광의 핵심이다.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 최근의 관광 강조 정책 기조를 보면, 북한은 어떤 국적의 관광객이든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정체기에 들어선 외래관광 시장의 도약을 위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북한에 가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그 기대를 채우고 올 것인가이다. 평양을 제외하면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은 관광 콘텐츠 다양화에 주력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항로 재개와 크루즈 운항, 북한의 어촌체험마을과 수산 특산물 시식, 북한 바다에서의 스노클링과 다이빙, 북한 갯벌과 습지에 서의 해양생태관광과 해양치유관광은 관광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1년에 1번 이상 바닷가를 방문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활동이라도 새로운 공간에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화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연안·해양 분야의 사업과 구상이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2020’에서 논의되었다. 관광 뿐 아니라 환경·자원, 수산, 해운·항만 분야의 평화경제 기여 가능성과 사례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호의 ‘지상 중계’는 온라인으로 중계된 해양수산 평화경제 세션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세션 전체를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뉴스’는 여느 호와 마찬가지로 지난 3개월간의 북한 해양수산 소식을 모아 요약했다. 해양수산업계와 북한·통일전문가가 섞여 있는 독자들에게 북한 뉴스가 어떤 형태와 용도로 제공되어야 유용할 지 연구진은 계속 고민 중이다. 제목이라도 훑으면 북한의 바다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차츰 세련된 정보 가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기획 논단]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 모색

- 개념과 이슈,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차장)

북한 개별관광 대두 배경

2020년 남북관계는 단절과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그 경색 국면의 물리적 깊이와 폭은 확대됐다. 관계 회복을 위해 올해 초 그나마 활발히 전개되던 북한 개별관광 논의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추진 논의 자체가 사그라졌다. 다만 최근 ‘작은 교역’을 통해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뜻을 밝힌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으로 다시 개별관광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북한 개별관광의 개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그 현실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개별관광의 개념과 이슈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논의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의 출발선상에 이미 개념과 이슈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 개별관광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와 맞닿아 있다. 2019년 북미정상회담 성과라는 거시적인 결과를 기다렸던 남과 북 사이의 간극으로 남북관계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재개는 점차 더 멀어졌고 그러는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북한 개별관광 방안이 대두했다.

남북 양측은 2018년 4월과 5월, 9월에 잇달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4월 27일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기 채택됐던 남북선언과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고 다방면에 걸친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및 친척 상봉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고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고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으며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선부론 전망도 대두했다.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해야 한다면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이었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 사항이었던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금강산관광재개 보다는 북핵문제 해결 문제에 보다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북한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2019년 내내 북미회담이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도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급기야 북한은 금강산 남측시설을 철거하겠다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현지지도하면서 남측시설 철거와 “우리식대로 새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뒤에는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체 개발계획에 따라 북측이 철거하겠다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고 국제정세와 남북협약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를 충분히 검토하여 금강산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창의적 해법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북한 개별관광이 그 중 하나이다.

북한 개별관광 개념과 내용

2019년 말부터 제시되기 시작한 북한 개별관광은 2020년 초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이후 통일부는 참고자료 및 2020년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개별관광의 개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쪽의 초청 의사를 확인해 방북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이라고 개별관광 개념을 제시했다.

이러한 개념에는 대북 국제제재 위반을 피하는 한편 국내법과 안전문제를 담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과 협력체의 설립·유지·운영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2375호 18항을 준수하기 위해 협력사업체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대량 현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방북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초청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안전문제를 담보하고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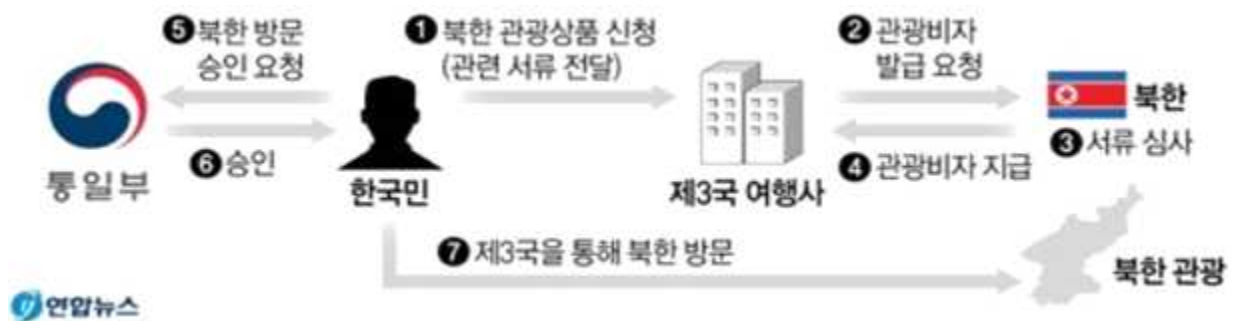
정부는 개별관광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한 개성·금강산 등의 방문이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북측과 방북에 관련된 포괄적 합의를 하고 초청의사 확인 서류를 수령하여 진행한다. 이산가족 등 방문 희망자는 동 단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하여 참가한다. 두 번째 방안은 우리 국민의 제3국을 경유한 개별관광이다. 우리 국민 중 관광목적으로 방북을 희망하는 자는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하여 방북한다. 북한 비자를 발급받고 제3국 여행사가 북측으로부터 남측 관광객을 허용 받는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세 번째 방안은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이다. 현재 북한 관광상품과 남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여행사들이 많은데 남과 북을 모두 방문하려면 북한을 관광한 뒤 중국 베이징을 거쳐 남한을 관광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세 번째 방안은 외국인 대상으로 직접 DMZ를 가로질러 남과 북, 북과 남을 이동하게 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개별관광이란 일반적인 해외 개별 여행 형태와는 엄연히 다르다. 관광부문에서 개별관광(FIT, Foreign Independent Tour)이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항공, 숙박, 일정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여행으로 단체관광에 대응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별관광은 이러한 일반적인 개별관광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북한 관광에서 이러한 관광 형태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관광은 사실상 모두 단체관광이다. 창의적 해법 차

원에서 제시된 개별관광이란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량 현금 문제 우회 방안을 찾는 가운데 대두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지불 방법이 여행사를 통한 일괄 지불이 아니라 숙박, 교통 등의 지불을 개인이 직접 하거나 소규모로 나눠서 한다는 차원에서 개별관광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개별관광 방안 가운데 첫 번째 안은 기존에도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그 프로세스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은 기존에 이뤄지지 않던 관광 형태이기에 그 진행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의 예상 프로세스



자료: 연합뉴스, '대북 개별관광 3가지 형태', <https://www.yna.co.kr/view/GYH20200120002200044>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관광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중국 또는 영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상품을 신청한다. 북한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 재직증명서, 신청서와 숙박비용 등이 필요한데 서류를 접수한 북한 당국은 서류 심사를 거쳐 관광비자를 발급한다. 북한 관광비자를 발급 받은 우리 국민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에 따라 북한방문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승인 요청을 받은 통일부가 승인을 하면 대상 국민은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에 나설 수 있다.

이 프로세스와 관련해 기존과 다른 특이점은 정부가 '비자 방북'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남북교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방북승인 요건으로 필요서류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기존에는 이를 북한 초청장으로 해석했으나 향후에는 비자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실제로 비자를,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그림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신변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강산관광 중단 배경을 고려할 경우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위해서는 신변안전보장을 어떤 형태로든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금강산관광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신변안전보장이 담보됐는데 향후 전면적인 개별관광이 추진될 경우 북한 전역에 걸친 포괄적인 신변안전보장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개별관광 방안인 외국인 남북연계관광의 진행 프로세스를 중국인 관광객의 북에서 남으로의 연계관광을 가정해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남북 당국간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추진에 합의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더라도 외국인의 DMZ를 통한 출입경 루트에만 동의하면 관광은 가능하다. (2) 남-북-중 여행사가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3자간 공동 개발이 아니라 남-중, 북-중 여행사간 상품 계약 형태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인 관광객이 중국 여행사 통해 상품을 신청하고 (4) 여행사는 주중 북한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에 북/남 사증을 신청한다. (5) 중국인 관광객은 북한 관광에 나서고 중국 여행사는 우리 정부에 DMZ를 넘어오는 통행계획을 제출



한다. (6) 남측 정부는 DMZ를 관할하는 UN사에 통행일 48시간 전까지 통행계획을 통보하고 UN사는 이를 승인한다. (7) 중국인 관광객은 CIQ를 통해 입경하고 한국을 관광한 뒤 출국한다.

세 번째 방안에서는 DMZ 통과를 가정할 경우 UN사의 통과 허가권 문제가 민감할 수 있다. 2003년 1월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UN사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관리구역에 한해 출입관리를 한국 측에 위임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방북 허가절차와 관련해서 UN사가 언제든지 통과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사례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실제로 UN사는 2019년 8월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불허하거나 그해 6월 고성 GP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보습을 보여왔다. UN사의 통과 허가권 문제는 군사적인 성격에 국한되기에 관광 부문에서는 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견이 분명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UN사가 제동을 걸 경우 관광을 추진하는 데 걸

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 개별관광을 둘러싼 주요 이슈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북한 관광이 과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느냐는 문제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북한 개별관광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 여부

구 분	제재 조항	조항 주요 내용	북한 관광 관련
관광금지	X	X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 아님
대량현금	유엔 대북제재 2094호14항/11항// 2321호 35항 (2016.11.30.)	대량현금 이전금지/ 핵·탄도미사일·여타 WMD 등 결의상 금지활동 관련 금융·자산·자원 제공 금지	대량 현금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중국여행사 북측에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 지불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 대북제재 강화법(2016.2.18.)	안보리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 기관·기업·개인을 겨냥해 제재	관광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 아니므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아님/ 단 대상기업 정확히 확인 필요

구 분	제재 조항	조항 주요 내용	북한 관광 관련
금수품	유엔 대북제재 2397호7항 (2017.12.22.)	모든 산업용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 전 금지*	카메라, 노트북 등 반입 시 위반 여부 따 질 필요(과거 사례)/ 단 외국인 방북 관광 객에게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 않음
경협사업 금지	유엔 대북제재 2375호18항 (2017.9.11.)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협력 체 설립·유지·운영 금지	관광객 모집은 단순 중개행위, 북쪽과 수 익 배분도 하지 않아 협력업체·합작사업에 해당 안함/ 사업방식에 따라 논란 여지
남북교역/ 대북투자금지	우리 정부 5.24조치	개성공단·금강산 제외 방북불허, 남북교 역중단, 대북신규투자금지 등	2020.5.20. 통일부, “실효성 상당부분 상 실” 사실상 해제
운송제재	미국 독자제재 행정명령 13810호 (2017.9.20.)	북한 기항 선박, 방문 항공기 180일간 미국 입국 금지	
(예외조항)	유엔 대북제재 2397호25항	북한 내 인도지원 관련 국제기구 및 비 정부기구 업무촉진 또는 결의 목표와 부합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 시 사 안별로 면제 가능	

*2018년 타임플루 대북지원 당시 미국은 화물차량이 제재에 저촉된다는 의견이었으나 향후 제재 해석 완화

[출처: 저자정리]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관광은 기본적으로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유엔은 북한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과 러시아, 우렐과 북미 국가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북한 관광을 다녀왔다.¹⁾

대량 현금 문제는 그간 남북관광 재개,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할 때 핵심적인 고민 지점이었다. 금강산관광이 이뤄지던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현대는 관광대금으로 북측에 4억8천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금강산관광 재개로 다시 이정도 규모의 관광대가 송금이 이뤄질 경우 대량 현금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관광은 앞서 설명한 대로 대량 현금 관련 조항을 염두에 두고 나온 개념이기에 해당 문제에서 개념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 조항에서 대량 현금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개별관광일지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이 유입된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기존에 북한 관광을 활발히 전개했던 중국 여행사들이 북측에 지불했던 금액 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참고할 만하다.

세컨더리보이콧 문제도 개별관광을 둘러싸고 문제제기가 이뤄졌던 국제사회 제재조항이다. 세컨더리보이콧이란 미국의 제재대상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기업·개인까지 모두 제재를 가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관광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로 세컨더리보이콧의 적용을 받을 소지는 없다. 다만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북측 기관 등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지 여부는 유념해야 한다.

금수품 사항은 관광을 둘러싼 제재 문제에서 가장 ‘고전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즉 관광을 하면서 소지하고 들어가는 물품, 예를 들어 카메라, 노트북 등이 유엔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북한에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물품에 해당될

1) 북한관광객수 통계는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중국국가여유국(현 중국문화여유부)을 인용 보도한 RFA 보도(2019.5.24.)에 따르면 2018년에 북한을 찾은 중국인은 120만 명이었으며 북한 국가관광총국 홍보국장을 인터뷰한 중국 신화사 통신 보도(2019.7.26.)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20만 명이었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더 곤혹스러울 수 있는 점은 경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평소에는 문제 되지 않다가도 간혹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었다.²⁾ 다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경협사업 금지조항은 2017년 유엔 대북제재 2375호에 따라 시작됐는데 이는 북한과의 모든 신규 또는 기존 합작 사업과 협력체의 설립과 유지, 운영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별관광 형식에서 관광객 모집은 단순한 중개행위일 뿐, 북쪽과 수익배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협력업체 또는 합작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였던 5.24조치에서는 남북교역과 대북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조치는 올해 5월 통일부에서 사실상 해제 의사를 보였기에 향후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독자제재 형태로 북한에 기항하는 선박과 방문 항공기의 경우 180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항공사나 선박을 통해 북한 개별관광에 나서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사항은 없다.

북한 개별관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제재 문제는 아니지만 개별관광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여행 보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대북제재를 우려한 보험 회사들이 북한 여행 관련 여행자보험 상품을 판매할지가 확실치 않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구인 대상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고려투어스 등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고려투어스는 중국 인민보험공사(PICC)를 통해 관광객에게 보험가입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관광상품의 경우 보험 가격은 50유로로 책정되어 있다.³⁾

물론 북한 개별관광을 둘러싼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안전문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 개별관광을 추진할 때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글의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사항은 어떤 형태로든 보장이 되어야 한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전역에 걸친 포괄적인 신변안전보장 체결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 연계관광 추진 사례

한편 북한 개별관광의 3가지 방안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과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방안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이전에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DMZ를 통과해 남북관광을 한 외국인들의 사례가 있었다. 2013년도에는 뉴질랜드 오토바이 여행단이 북에서 남으로 종단 여행을 한 바 있다. 5명으로 구성된 이들 여행단은 남북 양측의 승인을 받고 경의선 육로로 DMZ를 통과한 첫 번째 외국인들로 기록돼 있다.⁴⁾

2014년에는 러시아 고려인 오토렐리팀이 마찬가지로 육로로 DMZ를 통과해서 북에서 남으로 이동했다. 모스크바를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이들은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여 이 행사를 기획했는데 2019년에도 유사한 경로로 재차 추진했지만 북측이 입국을 거부해 무산됐다. 2015년도에는 위민크로스 DMZ 대표단이 경의선 육로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해 내려왔다.

2) 실제로 2019.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취재차 방북하는 기자들의 노트북 등 취재장비가 미국의 반대로 반입 논란이 일 바 있다.(연합뉴스, “금강산 민간행사 기자단, 美제동에 취재장비 지참 어려울 듯” (2019.2.11.))

3) 고려투어스 홈페이지(<https://koryogroup.com/insurance>)

4) 연합뉴스, “남북 승인 속 남북종단 뉴질랜드 5명 DMZ 넘어 입국” (2013.8.29.)

외국인의 남북연계관광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도 이미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여행사들은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지리적 이점과 절대적인 배후시장, 북한 및 한국 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 등으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통독 30주년인 올해 일부 독일 여행사들도 남북연계관광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 당국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관광 타진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들 여행사들은 한반도관광이 불러올 국제적인 관심과 이슈화로 새로운 여행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북한 관광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일부 여행사에서 유사 상품을 개발해 홍보를 시작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개별 차원이 아니라 30명으로 구성된 여행사 패키지 형식으로 추진된 이 상품은 중국을 거쳐 평양에 들어가는 것으로 남과 북 여행사 사이에 중국 여행사가 매개고리 역할을 하는 형태이다. 인천-(중국)선양-평양-선양-인천 코스(4박5일)로 구성됐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북한 개별관광 향후 전망

북한 개별관광은 새로운 길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의 의지, 국민 여론의 뒷받침, 미국의 지지, 북한의 호응이라는 4박자가 맞아야 가능한 고난이도 사업이다. 우리 정부의 의지는 이미 확인됐다. 북한 개별관광 화두를 던진 것이 정부다.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일단 화두를 던진 뒤에 지속해서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인영 장관도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별관광의 의미와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⁵⁾ 국민 여론도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우호적인 반응이다. 한 언론사가 올해 6월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개별관광과 실향민 고향 방문, 코로나19 방역협력 등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9.6%가 지지했다.⁶⁾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민통일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66.8%는 개별관광과 현물 지급 등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실질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⁷⁾

그러나 그 특성상 북한 개별관광이 정부의 의지와 국민여론의 지지만으로 이뤄진다고 하기는 난망이다. 개별관광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미국의 지지가 없을 경우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대북제재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고 해석 여하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제재 조항의 하나하나 자구와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량 현금 규모에 대한 해석, 개별관광 대상기업 문제, 고성능카메라, 노트북 등 반입 위반 여부, 경험사업 방식 등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미국은 자신들의 국제 전략 속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개별관광으로 대북제재 최대압박 기조가 흔들린다면 자신들의 협상력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할 가능성이 크다. 즉 동북아에서 영향력 유지를 하는 데 있어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공조를 그 한 축으로 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국제공조가 흔들린다면 자신들의 그랜드 플랜이 흔들릴 수 있다고

5) 이인영 장관은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남북간 교착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금강산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 해법 모색이기도 하다”며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육로로 갈 수 있는 개성, 금강산 관광, 제3국을 통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으로 대상과 지역을 점차 넓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news1, “이인영 통일, “北개별관광, 남북 교착상태 돌파할 창의적 해법” (2020.8.14.))

6) KBS, “[여론조사①] 대북전단 “반대” 60%...교류협력 추진 “찬성” 69.6%”(2020.6.14.)

7) 연합뉴스, “민주평통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금강산 개별관광 찬성””(2019.11.27.)

여길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추진 과정이 더욱 지날 수밖에 없기에 미국의 잣대가 공평한지는 차치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을 설득하고 개별관광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4박자에서 마지막 하나의 퍼즐은 북한의 호응 여부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두 손바닥 가운데 하나라면 북한의 호응은 그 나머지 한 손바닥이다.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에 현재 조건 하에서는 북한의 호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도 있다. 호응 여부는 북한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올해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정도로 남북관계를 급격하게 경색국면으로 끌고 갔다. 일단 김 위원장이 대적관계로의 전환을 보류하라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다. 우리측의 대화재개 움직임에 표면적으로는 아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은 개별관광 추진을 막는 절대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의료 및 방역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북한은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자 바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2020년 1월 외래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중단 이후 벌써 8개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북한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니 개별관광을 추진할 기반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는 셈이다.

언제까지 국경봉쇄, 관광중단이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한 통제가 국내는 물론 주변국, 해외에서도 이뤄져야 인바운드 관광을 재추진하려 할 것이다. 경제난이 극심해지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방역과 경제난 그 사이의 고민 속에서 방역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북한은 과거에도 방역 및 질병과 관련하여 관광을 중단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우선 2003년 북한은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SARS로 외래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약 5개월 동안에도 북한은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로 비자발급을 중지하고 기 입국한 외국인인 21일간 격리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동북아에서 거의 발병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매년 관광재개는 질병 감염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인되어야 이뤄졌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코로나의 경우 역설이 발생했다. 코로나가 북한 대문을 걸어 잠그게 했지만 반면 코로나가 남북관계 악화 속도를 그나마 늦추는 구실이 된 부분도 있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코로나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것은 자명하다. 북한 경제는 2019년 대북제재 속에서도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8.5%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낮은 성장률이다. 북한 외래관광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북한을 찾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6월 북한을 방문하면서 대북제재로 북한 지원이 녹록지 않자 관광객 5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⁸⁾ 하지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북한도 국경을 봉쇄했고 관광은 완전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도 막혔다. 북한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원산갈마지구 개발도 올해 4월 태양절 무렵 준공 예정이었다가 연기됐다. 이미 내장재 자재 부족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었는데 재차 연기된 것이다. 북한은 준공과 맞물려 중국 관광객을 원산지역에 대거 유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실제 중국 여행사들과 다양하게 접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마저도 모두 중단됐다.

8) 연합뉴스, “中, 대북 물밑지원 본격화...북한 관광도 적극 장려”(2019.8.20.)

〈표2〉 코로나19 확산 전후 북한 상황 변화

구 분	2020년 이전 (코로나 19 영향 전)	2020년 초 이후 (코로나19 영향 후)
북핵협상 (북미관계)	점점찾기난망/ 양측 모두 '시간은 자기편'이란 기대속 그나마 타협점 논의	점점찾기난망/ 미 대선 앞두고 상황관리에 보다 주력/ 대선전까지 불확실성
북한 경제	대북제재 속에서도 '그럭저럭 버티기' / (한국은행) 2019년 북 GDP 0.4% 증가	(피치솔류션스) 올해 북한 GDP 성장률 -8.5% 예상
북한 외래관광	중국 관광객 급증 (시진핑 2019년 방북후 500만 관광객 지원설)/ 외래관광 통한 관광산업육성 자신감	국경 전면 봉쇄/ 외래관광 완전 중단/ 관광통한 외화수입 급감
북한 3대 관광특구	원산갈마지구 2020.4월 개장 추진/ 중국관광객 등 유치노력 활발	원산갈마지구 개장 재연기/ 관광객 유치 불발
금강산시설 철거	북한 강경 분위기	물리적으로 추진 연기(2020.1.30.)
개별관광 등 창의적 해법에 대한 대응	개별관광 등 제안에 관심 안보임/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 '작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	'작은 것'에도 관심을 뒤야 할 상황/ 물물교환 방식 교류 논의

출처: 저자 정리

반면 금강산시설 철거 추진은 중단됐다. 지난해 하반기 남북관계 악화 시발점으로 작용했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경고는 남북 당국 간 서면 협의 속에 북한 강경 분위기로 실제 철거가 강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짙었는데 북한은 올해 1월 추진 연기를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개별관광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그간 북미협상을 통해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 개별관광과 같은 '작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작은 것'에도 관심을 뒤야 할 상황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물물교환과 같은 '작은 교역' 거래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개별관광이 향후 추진될 수 있을지 아직 긍정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선부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물리적 장애가 절대적이다. 게다가 앞서 밝혔듯이 4박자가 어우러지는 분위기 조성 과 타이밍을 포착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2021년은 한반도 개별관광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통제가능해지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미관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소재(2022년 베이징올림픽)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남북은 10.4 정상선언을 통해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600명 규모)을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베이징에 보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곧 다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다. 이번에는 동계 올림픽이다. 다시 시동을 걸만하다. 경의선을 활용해 남북공동응원단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 각국 훈련캠프 유치 후 경의선을 통해 베이징에 보낼 수도 있다. 남측에 들어온 외래관광객 또한 이를 통해 베이징올림픽 관광에 나서는 상품을 구성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역 경로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펼칠 수도 있다. 모든 게 가정법이지만 2021년에 이러한 가정 상황이 현실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길 소망해 본다.

[인터뷰]**북한관광 현황과 전망****북한관광 전문여행사 「고려투어스」**

싸이먼 커캐럴 고려투어스 총괄매니저

Q1. 코로나 발생 이후 북한은 국경을 전면 폐쇄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이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정보를 들으신 바 있습니까?

A. 안타깝게도 관련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당분간 어떤 일정이 나오리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국경 차단 결정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정보와 지침은 상의하달 방식이고 그런 명령은 그저 복종해야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국경이 다시 열린다는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뉴스가 될 것입니다. 과거 사스와 에볼라로 인한 국경 차단 경험을 생각할 때 그런 조건에서 국경이 언제, 특정 날짜 등에 열릴 계획이라는 것이 미리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Q2. 북한은 최근 원산, 삼지연, 양덕 등 관광지 개발에 국가적인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게다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의 독자적인 관광지 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관광 수요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A. 물론 올해는 아니지만 성수기 중국인 관광객 수는 꽤 많은 편입니다. 일당 1천 명 방문 제한이 있기 전까지 평양 도착 방문객이 하루 2천 명에 달하기도 했지만 평양에서는 하룻밤만 지냅니다. 삼지연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극소수이고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마리조트는 모든 중국인 방문객이 거기서 체류한다고 해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 리조트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및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동 거리가 충분히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먼 곳에서 대규모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Q3.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 관광객 수백만 명을 북한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 다들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면 중국인들이 휴일에 그렇게 갈 사람들일까요?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중에 정부가 보내서 온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중국에서 연휴라고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고 보조금을 주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그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허용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시장의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중국인 관광객을 보내고 싶다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서 (열차와 비행기) 수용인원을 늘리거나 국경을 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관광객을 보내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은 중국인의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이 결국 시장이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 가정(assumptions)부터가 틀렸습니다. 198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그 언급은 현실성이나 사실성이 전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Q4. 북한은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원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정치적 발언과 경제적 상황에 따른 본심이 다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 A.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갈마리조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곳은 명백히 한국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산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상(갈마지구)에 머물러도 도시를 배회할 수 없다는 뜻), 향후 도로는 물론 바닷길과 하늘길로 오는 잠재적인 한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는 분명 이런 여행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중국은 아닙니다(혹은 이미 방문했을 겁니다). 북한 당국이 이런 의견을 지지하는 발언은 없었지만 저로서는 어느 정도 자명해 보입니다. 사실 그런 발언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도 아닙니다.

Q5.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량현금을 보내지 않고 우리 국민이 개별관광을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미국이 이런 방식의 개별관광을 반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A. 미국은 북한과의 교류를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북한으로 여행가는 것을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국이 그런 여행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남북한이 관련된 일인데 미국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행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한국돈이나 북한돈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화(USD)가 아니면 사실상 다른 화폐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행바우처와 같은 형태는 어떨까요? 문제는 북한에 서비스, 즉 호텔이나 가이드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취해야 제재를 위반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개별관광을 추진하려면 정부는 아마도 민간 기업을 지지하고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Q6. 한국인이 제3국(중국)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백두산, 나선 등)을 단기(3일 이내) 여행하는 경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모든 것이 미리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집하는 관광객의 경우 독단적으로나 무작위로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경우에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종교 활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자는 종교와 관련된 물품을 유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서구권 관광객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한국의 기독교인은 종종 이 문제에 대립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방문했어도 종교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방문자는 규칙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잘 숙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7. 한국정부가 제안한 개별관광 형태 중에는 외국인이 남북한을 통과하는 여행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즉, 북한으로 입국해서 남한으로 출국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상품과 서구권 관광수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행사로서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A. 우리 회사는 이 관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건너가는 여행은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꿈꿔온 것입니다. 한국이나 북한 양측 모두에서 큰 잠재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불법인 것이 한국에서는 합법이고 그 반대인 경우라거나 관세, 비자 등 여러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계획하고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여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머지않아 이루어지기를 저 역시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Q8. 남북한 관광협력은 남북협력과 평화실현에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광협력과 왕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남북한 관광협력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또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주의 깊게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국으로 가는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관광 시장입니다. 서구권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 등 서로 다른 시장에는 서로 다른 수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DMZ를 건널 때 몇 명이 수용 가능한지, 어떤 방법과 위치를 제안할 것인지, 남북한 당국 간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다루어야 할 문제는 많지만 DMZ를 건너는 관광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관광객이야 말로 남북 간 이동과 협력을 증폭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일 수 있지만 그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알기]

북한의 외래관광 역사와 변천

진희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북한 관광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따라 관광 대상과 목적이 달라짐

북한에서는 관광을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민경제의 발전면모, 역사유적 등을 구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따라 관광의 목적과 대상도 달라 내국인 관광은 김일성, 김정일 등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사적지에 대한 답사 및 견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인 관광의 경우 순수 관광 목적으로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백두산 등 명승지와 평양을 중심으로 서해갑문, 주체사상탑 등의 건축물과 대집단 체조 관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 나선 지역의 반나절 관광도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외래관광은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1984년 이후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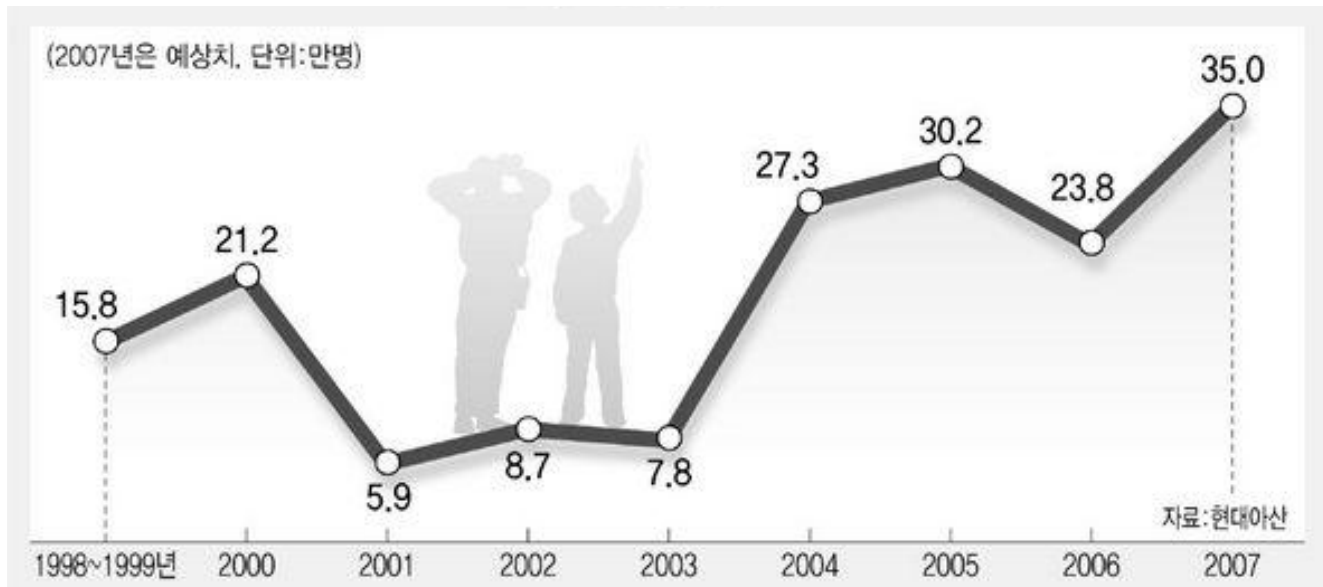
1960~1970년대까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간 친선유치 차원의 소규모 휴양 관광단을 유치하고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한 ‘조국방문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관광을 경험했다. 1984년 북한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합영법’을 채택했으며, 관광부문에서도 합영, 합작 사업과 외국인 관광 유치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1986년에는 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개편하였으며, 1987년에는 관광개방지역을 선포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한편 세계관광기구(UNWTO)에도 가입하였다. 1990년대에는 나진-선봉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외화획득에 주력하였으며, 1992년에는 ‘합작법’을 제정하며 합작투자 대상 업종에 관광업을 포함시켰다. 1995년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에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관한 관광규정을 제정하였다.

북한 관광의 산업화 계기는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

북한의 관광업이 본격화 된 것은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로 평가할 수 있다. 2002년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백두산 관광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12월부터는 개성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백두산 관광 사업은 현지답사 이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도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이 기간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의 숫자는 약 193만 명, 개성 관광객(2007~2008년)은 약 11만 명 이었다.

〈그림2〉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1998~2007년)



자료: <http://www.hani.co.kr/arti/PRINT/251171.html> (검색일: 2020.9.22.)

한국인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립을 발표하고 해외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독자적으로 외자 및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 간 관광 협력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금강산 관광은 북한 관광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관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기준 북한 외래 관광객 숫자는 20만 명 이상이며, 90%가 중국인

북한은 2005년 원산경제대학에 관광경제학과를 개설하는 등 관광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해외 관광객 대상의 패키지 상품[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관광(2012년), 대집단체조 관람과 평양 관광(2013년), 원산 에어쇼 관람(2016년), 평양국제마라톤 대회(2014~19년)] 등을 판매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27개의 경제개발구 중, 5개의 관광개발구(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온성섬관광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청수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를 지정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북한 외래 관광객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김춘희 북한 국가관광총국 관광홍보국장은 2019년 7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북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약 90%가 중국인”이라고 밝힌바 있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1988년 48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단둥-신의주, 2018년부터는 훈춘-나선 간 당일 관광이 활성화 되어 하루 최대 500명의 관광객이 몰리기도 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국경을 전면 폐쇄하고 있어 중국 관광객의 입국도 제한되고 있으나 향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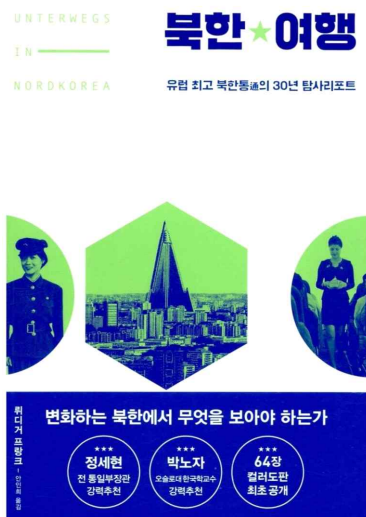
[北 리뷰]

북한 여행

한겨레출판사, 뤼디거 프랭크, 2019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북한 유학생 출신 서양인 경제 전문가가 본 북한 탐사리포트



뤼디거 프랭크. 1969년생으로 동독의 라이프치히 출신이다. 조국의 분단과 통일을 직접 경험한 경제학자이자, 이 책의 저자이다. 그는 핵물리학자이던 아버지와 함께 5세 때 소련에 살면서 동아시아와 북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1991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한국어 연수를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자이다. 현재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어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가 28년간의 북한 여행 경험을 담아 독일어로 출간하였으며 작년에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그는 북한을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마치 내가 북한을 여행하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한 묘사가 압권이다. 대부분이 그렇듯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인 저자는 북한 여행을 입체감 있게 풀어내고 있다. 각

국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여행서적과는 달리 새로운 형식의 북한 여행 가이드북인 셈이다. 북한으로 입국하는 순간부터 음식과 숙박, 관광지 추천은 물론이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유의할 점을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여 거부감은 덜어내고 공감은 극대화시켜준다. 아마도 저자의 28년간 북한 경험이 묻어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세심하고 미시적인 시선일 것이다.

이 책은 서양 출신 북한 전문가가 소개하는 북한여행기라는 점에서 충분한 매력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백미는 따로 있다. 바로 북한을 여행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을 시원한 유머로 풀어낸 저자의 위트이다. 큰 소리로 웃을 정도의 장면은 아닐지라도 허를 찌르는 그만의 위트가 무뎌지고 재미없기로 소문난 독일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우며 제약이 많은 북한이 아이러니하게도 관광 산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풍자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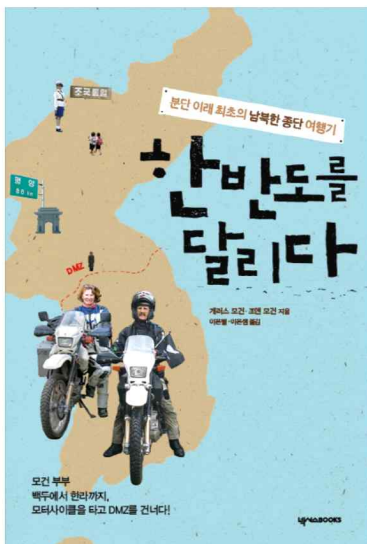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서양인 북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여행이라는 형식을 빌려 우리가 모르는 북한을, 어쩌면 북한이 감추고 싶어 했던 부분까지도 조금씩 들추어내는, 읽는 내내 외나무다리를 걷는 듯한 아슬한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많은 이들 특히 서양인들이 왜 북한을 여행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으로 이 책은 충분하다.

한반도를 달리다

개러스 모건·조앤 모건, 넥서스BOOKS, 2018

황주희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수료)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한 종단 여행기: '백두·한라 오토바이 미션'



한국에서는 대북제재 하 북한관광 재개를 위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하여 판문점을 방문하여 남북이 할 수 있는 '작은 접근'부터 진척 시켜 나가야 한 다며 남북교류협력의 의지를 표명했다.

대북제재에 코로나19까지 남북관광의 길은 요원해만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남북관광 재개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응원해준다.

저자는 뉴질랜드의 개러스 모건, 조앤 모건 부부로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는 모험가이자 자선 사업가이다. 2012년 한반도 종단 여행을 계획하고 2013년 그의 친구들 3명과 함께 이 꿈같은 일정을 실현했다. 이 여행기는 총 9,000여 킬로미터의 여정으로 러시아 극동 북부 마가단에서 시작하여 블라디

보스토크로 이동, 북한으로 입국하여 두만강, 백두산, 함흥, 평양을 지나 DMZ를 거쳐 서울, 속초, 제주, 부산까지 이어진다. 한국 전쟁 이래 최초의 백두대간 종단 여행기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더 도전할 수 없었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 여행기는 '북한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에서 시작된다.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은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자는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한국의 비자를 받고 국경을 통과하는 에피소드를 자세하게 담았다. 그리고 두만강을 넘어 북한의 나선, 청진, 무산, 삼지연, 혜산, 흥남, 평양, 향산 등 도시와 도시를 오토바이로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북한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저자가 '백두산의 돌'을 '한라산'에 옮겨 놓으면서 전달하는 평화의 메시지에는 남북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함께 녹아있다.

우리의 현실은 개별관광도 성사시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토바이로 러시아 국경을 넘어 북한에 입국하고 DMZ를 가로질러 한국까지 도착하는 여정은 비현실적으로만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이상적인 결과를 향한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하룻밤 만에 성공할 수 없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준다. 의지가 있다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그에 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원의 메시지인 셈이다.

[지상 중계]

KGFP2020(Korea Global Forum for Peace) KMI세션 : 해양수산 평화경제-동서해안 벨트와 공동특구 활용방안

2020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통일부 주최로 KGFP2020이 개최되었다. KGFP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및 지지 제고, 정책 대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각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5트랙 국제다자협의체로 올해 11회를 맞이하고 있다.

KGFP2020 중 KMI는 「해양수산 평화경제-동서해안 벨트와 공동특구 활용방안」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윤인주 부연구위원(KMI)의 발표 이후 좌장을 맡은 김종덕 연구부원장(KMI)의 주도로 박경애 교수(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김영관 총괄대표(팬스타그룹 북방사업단), 이성우 본부장(KMI)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전하고자 한다. 이날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한반도국제 평화포럼’을 검색하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발표] 해양수산 평화경제-동·서해안 벨트와 공동특구 활용방안

윤인주(KMI 부연구위원)

I. 평화경제

- ‘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학’ 등의 개념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중국과 대만의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한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
- 남북 간 상호교류와 경제협력 강화 등의 과제를 실현해야 하며 북핵문제, 남남갈등 해소, 남북 간 신뢰 회복 등의 문제가 존재함

II. 동·서해 벨트와 공동특구

-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에서는 3대 벨트로 환동해 벨트(에너지, 자원, 물류, 관광 등), 환서해 벨트(산업단지, 물류, 전력 등)와 접경지역 벨트(환경, 관광 등) 제시
- 동·서해 벨트 중 접경 지역 연안·해양을 활용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할 수 있음
- 동서해안 공동특구 조성 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특구 내 산업 간 가치사슬 연계, 둘째 특구 및 벨트 내 산업단지와 국내 주요 항만, 산업단지와 연결 문제임

III. 연안해양 프로젝트와 전망

- (환경·자원) 난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남북의 과제는 동일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을 목표로 해양영토·해양자원의 관리역량 증대와 한반도 환경·생태계의 연안통합관리와 해양공간계획 마련이 필요함
- (수산) 수산업은 남북 모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수산자원 공동 관리 기반 구축 및 생산 역량강화를 목표로 원스탑 시스템(생산-유통·가공-수출) 구축과 내수면 및 냉수성 어종 양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해운·물류) 남북 간 항로 재개 및 물류 협력 시 아시안하이웨이와 TSR 남북연결노선과 연계한 해륙 복합 운송망을 통한 성장 잠재력 높음. 향후 북극항로 개발에 따른 기회도 존재
- (항만) 한국의 북방경제협력 추진과 북한의 연안 중심 경제개발구 구상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향후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전략적 위치를 모색할 수 있음

IV. 북한 동·서해 연안 발전 구상안

- (신의주·평북해역권) 대중특화 복합물류기지와 해양생태관광 거점
 - 주요 협력 과제: 압록강하구 해양환경협력, 신미도 생태관광지구 조성 등 해양관광과 대중 특화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등
- (남포·평남해역권) 수출중심 임해산업단지 및 조선·항만 상생 거점
 - 주요 협력 과제: 남포 연안통합관리 고도화, 문덕 람사르습지 보호협력, 남포 수산물수출가공단지, 남포 수출입 종합거점항 조성 등
- (해주·황남해역권) 서해접경 해양수산업 지원 및 신산업 개발 거점
 - 주요 협력 과제: 생태관광 및 복합해상풍력단지 개발, 해주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공동어로 지원 거점어항 조성, 해주-인천 항로 복원 등
- (원산·강원해역권) 환동해 관광 및 수산 협력 거점
 - 주요 협력 과제: 금강산 해양관광지구 조성, 원산 해양복합도시 조성,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한해성 수산양식, 환동해 크루즈항로 개척 등
- (함흥·단천해역권) 광물자원 및 수산자원 개발 거점
 - 주요 협력 과제: 단천항 남북직항로, 단천 지하자원 수출 전략지원항 조성, 외해 플랜트 양식 도입 등
- (청진·나선해역권) 북방물류, 관광, 수산 거점
 - 주요 협력 과제: 나진 북방물류-관광 거점항 조성, 부산-나진 정기항로, 나선 수산물수출가공단, 해철보 해양관광특구 등
- (동·서해 접경해역권) 접경수역 평화번영과 주민교류 활성화
 - 주요 협력 과제: 접경 해양생태계 공동조사 추진, 수산자원회복사업 실시, 공동어로 및 해양사파, 한강하구 뱃길 복원, 수도권 물류체계 혁신 등
- (육상내수면) 내수면 양식·레저 활성화를 통한 내륙 해양수산물 증진
 - 주요 협력 과제: 접경 경제개발구 내수면 레저 개발, 경제개발구 내수면 양식 협력, 연안 해운 종합계획 수립 등

□ 토론1_박경애(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수산업과 해양관광 부분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분명해
남북협력 가능성 높음”**

- 향후 평화경제 가동 시 남북 협력에서는 북한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두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현재 북한이 직면한 중요 문제로 식량난, 외화난을 들 수 있음
수산업 협력은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분야. 수산업을 통해 주민들의 식량, 영양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수산업은 북한 외화벌이의 중요 수단이기도 했음. 또한 과거 북한 수산물의 남한 반입량도 많았으므로 남북협력 가능성 높음
- 두번째, 북한이 해양관광개발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유람선 관광에 관심이 높음

- 2016년, 외국 학자들과 함께 평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북한의 요청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 바 있음
- 북한은 해양관광 분야에서도 온대지역 해양관광, 해안 4계절 관광, 해양관광 투자경험, 숙박과 교통 운영, 관광비 설정 기준, 유람선 관광, 생태관광 인증 등의 문제에 주목했음. 따라서 해양관광 개발 분야에 북한의 수요가 높으며, 남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협력 사업 추진 필요
 - 북한을 방문해 여러 개발구를 돌아봤던 외국학자들은 청진개발구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 공업, 용지, 교통 조건이 좋으며 철도, 항구, 비행장을 갖추고 있음
- 북한은 최근 지속가능한 연안관리 분야에도 관심이 높음.
 - 북한과 연안관리 관련 프로젝트를 상의했던 경험이 있으며, 남한의 연안관리 경험 공유 가능
 - 수질오염 등에 대한 공동 연구·조사도 좋은 사업이 될 것. 2017년 백두산에서 북한과 함께 수자원관리 관련 워크숍을 진행한 경험 있음
- 향후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중요함. 남북한 지식공유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국제회의 등을 통한 지식교류 기회도 마련해야 함

□ 토론2_이상준(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 해양협력 구상은
한반도, 지역, 항만도시의 레벨에서
입체화 필요”**

- 평화경제의 의미와 미래를 코로나 팬데믹 등, 2020년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이해·전망해야 함
 - 생명, 보건, 환경 등의 가치에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해양수산 분야와 연관이 높음. 생명,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협력과 연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발표 내용 중 해역별 구상을 세 가지 레벨(한반도, 지역, 항만·도시)에서 입체적으로 재정리 했으면 함
 - 첫째, 한반도 레벨에서는 남북연계와 중국·일본과 협력 측면에서 개발 전략과 우선순위 설정 필요함. 연장선상에서 8개 지역 중 우선순위로 도출할 필요 있음
 - 둘째, 지역 레벨에서는 우선순위와 통합개발의 로드맵 제시 필요
 - 셋째, 항만·도시 레벨에서는 항만과 배후지의 연계 및 통합개발 방안과 세부적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함
- 남북 항만 도시 간 연계 시도도 필요함. 예를 들어 부산-함흥 또는 인천-남포 등의 구체적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음
-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같은 남북 간 과거 합의 내용들을 아우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토론3_김영관(팬스타그룹 북방사업단 총괄대표)

“현재 가장 실효성 있는

대북 협력 사업은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하는 방안”

- 기업의 입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남북협력을 함께 모색했으면 함
 - 유엔제재 하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은 대단히 어려움
-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대북 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음
 -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관광협력, 노동자 파견 등이 지속되었으며, 북중 신뢰관계는 높아지고 있어 중국을 빼고 실제 대북 사업 추진은 어려움
 - 남·북·중 상호 신뢰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실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
- 북중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가능
 - 중국의 조선족 임금은 평균 55만원인데 비해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35만원 수준임. 언어가 통하는 장점이 있으며, 토지 임대료도 낮아 노동집약적 산업 진출에 용이함
- 북중 접경지역과 연계한 개별관광 추진 가능
 - 코로나 확산 전까지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다양한 루트의 북한 관광(백두산, 단둥, 나선, 금강산, 칠보산)이 진행되었음
 - 단둥과 나선은 육로관광이 진행되었으며, 도문-칠보산 열차관광도 진행
 - 유엔 제재의 대량 현금의 문제가 있으며, 중국과 연계해 우회 방안을 찾을 수 있음
 - 코로나 이후 북한 개별관광이 추진된다면 남·북·러·일을 연계하는 환동해권 크루즈도 가능함
- 남·북·중·러 에너지 협력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갈탄을 통한 수소 생산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북·중·러의 풍부한 갈탄 자원을 활용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사업이 논의 중이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한계가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토론4_이성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장)

“한반도 전체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 필요”

- 남북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 지원이 아닌 협력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한반도 전체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함.
- 미래지향적인 남북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이 항만·물류 부문에도 도입되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음.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 및 인프라 구축이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함. 미·중·일·러 등 주변국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며, 남남갈등에 따른 대국민 설득도 중요함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풀어 지정학적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지점으로 해양을 통해 대륙 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
- 항만과 육로의 연결을 통해 발전을 추진하는 점-선-면 전략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울산, 인천 같은 항만도시가 발전하고 도로를 통해 선이 연결되며, 국토가 발전했음. 텐진, 샤먼, 다롄 같은 항만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중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음.
 -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대다수 연안에 위치한 이유도 위와 같은 사례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철도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은 물류 수단임. 점이 시작되는 곳은 항만. 항만을 통해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며 선이 만들어 짐. 따라서 철도에 집중한 논의의 한계가 명확하므로 점-선-면의 입장에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뉴스 요약]

2020년 3분기 북한 해양수산 소식

해양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

「로동신문」, 7월 1일

- 세계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과 바다 환경 파괴의 심각성 소개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중앙통신」, 7월 7일

- 일본 외무성 산하 연구소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 공개한데 대한 반박 논평

“통이 큰 작전, 능숙한 지휘로” 「로동신문」, 7월 12일

- 황해남도 룡매도, 평안북도 홍건도 간척 공사의 내부망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홍건도간척지 2단계건설 힘있게 추진”

「로동신문」, 7월 19일

- 평안북도 홍건도 간척공사 2단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해안도시의 특색을 살리는데서 중시한 문제”

「로동신문」, 7월 19일

- 지방도시를 특색 있게 꾸리라는 당의 정책에 따라 남포시를 해안도시의 특색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미고 있음. 서해 푸른 물결을 상징하는 짙은 푸른색을 주색으로 선정하고 유리와 상징물(파도, 갈매기, 닻 등) 적극 활용할 계획

“월도간척지건설장에서 30만산대발파”

「로동신문」, 8월 14일

- 평안북도 월도지구 간척 공사 1구역 1차 물막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

“연안관리를 중심과제로 들어칠 때”

「로동신문」, 8월 17일

-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장마 및 폭우 피해 방지를 위해 연안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해안방조제 보수에 집중하며 보호시설 건설, 바람막이 숲 조성, 배수 갑문 관리 등의 준비 진행 중

“해안방조제보수와 논두렁높이기를 중시하고”

「로동신문」, 8월 23일

- 평안북도 곡산군에서 장마 및 폭우 피해 방지를 위해 황포제방을 비롯한 방조제 보수와 논두렁 높이기 총력을 다하고 있음

“지구온난화로 더욱 높아질 바다수위”

「로동신문」, 8월 23일

-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 수위 상승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소개

“중국에서 해상풍력발전소건설 추진”

「로동신문」, 9월 8일

- 중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현황 소개

“바다로 흘러드는 수지오물에 의한 후과”

「로동신문」, 9월 13일

-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바다 오염에 관한 세계적 연구 결과 소개

“서해의 날바다우에 솟아오른 자력갱생의 창조물”

「로동신문」, 9월 17일

- 평안남도 안석 간척지 준공. 2017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3월 1차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이후 취수 및 배수 공사를 비롯한 마무리 공사 완료

“하천관리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짜고들어야 한다” 「로동신문」, 9월 24일

- 황해남도 장연군의 하천관리 사례 소개. 하천바닥파기와 제방 쌓기에 주력하며, 기초파기와 속채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제방의 게 구멍 방지 등에 관심을 기울임

수산

“종자물고기사양관리를 과학화하여” 「로동신문」, 7월 3일

- 평안남도 숙천종어사업소에서 새끼 미꾸라지 40여 만 마리와 새끼 메기 약 150만 마리를 생산한 성과 소개

“혼합양식을 근기있게 내밀어” 「로동신문」, 7월 3일

- 함경남도 리원수산사업소에서 다시마와 홍합을 함께 양식하여 생산성과를 높인 사례 소개

“지역적특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로동신문」, 7월 3일

- 양어 발전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 강하천과 호수, 저수지, 온천 샘물 등을 활용해 가두리 양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 내수면뿐만 아니라 바다를 활용한 양어, 양식과 논판양어도 적극 진행할 것을 주문

“바다그물우리양어를 활발히 진행” 「통일의 메아리」, 7월 4일

- 함경남도 홍원수산사업소에서 우럭 가두리 양어 추진 중

“영양가높은 다시마영양액에 대한 제조방법 연구완성” 「메아리」, 7월 9일

- 수산물가공연구소에서 영양가 높은 다시마 영양액 제조 방법을 연구, 완성

“탐구전, 두뇌전을 벌려” 「민주조선」, 7월 9일

-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에서 합성수지인 폴리염화비닐과 파(波)고무를 혼합해 바다양식 자재 생산

“해안방조제보수에서 찾은 교훈” 「로동신문」, 9월 24일

- 평안남도 숙천군의 해안방조제 보수공사 사례 소개. 해안방조제 보수 공사에서 돌 확보와 위험구간 보수에 주력

“태천종어사업소에서 새끼쏘가리생산에 성공” 「로동신문」, 7월 11일

- 평안북도 태천종어사업소에서 새끼 쏘가리 생산에 성공해 지난 6월말 1만 5천 여마리의 새끼 쏘가리를 태천호에 방류

“성게양식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 적극 추진” 「조선중앙통신」, 7월 11일

- 함경북도 김책수산사업소, 련진수산사업소, 간해방류어업사업소와 함경남도 락원수산사업소, 서호수산사업소, 홍원수산사업소, 경포재배어업사업소 등에서 성게 양식 추진 중

“양어장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로동신문」, 7월 15일

- 강원도 문평제련소에서 자체 양어장을 꾸려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

“함경남도안의 수산, 양어기지들에서 새끼물고기생산성과 확대” 「메아리」, 7월 15일

- 함흥메기공장, 양화수산사업소, 하포양어사업소, 허천종어사업소, 신포동골천방류어업사업소 등에서 생산 성과 확대

“관점이 바로서야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천할수 있다” 「로동신문」, 7월 16일

- 축산과 양어를 균중적으로 진행하라는 당정책 관철을 강조하며, 평양 대동강식료공장의 사례 소개

“먹이문제를 실정에 맞게” 「로동신문」, 7월 16일

- 축산과 양어를 균중적으로 진행하라는 당정책 관철을 강조하며, 평안남도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농업 부산물과 축산 배설물을 활용하여 먹이문제를 해결한 성과 소개

“20여만마리의 새끼보가지 방류” 「로동신문」, 7월 16일

-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는 지난 6월 초 10여 만 마리의 새끼 황보가지(황복)을 민물에 적응시켜 대동강에 방류하였으며, 7월 초 다시 10여 만 마리의 새끼 검은 보가지를 서해에 방류

“다시마양식면적 1.2배 확대, 수확 한창-함경북도수산 관리국 산하 수산, 양식사업소들에서” 「류경」, 7월 19일

- 함경북도의 다시마 양식 면적, 전년 대비 1.2배 확대

“바다면 산촌에 꽃피는 생황” 「로동신문」, 7월 21일

- 간간지대인 평안북도 구장군에 위치한 룡철공예전문협동농장에서 계단식 양어장을 조성해 성과를 보고 있다는 소식

“각지에서 1억 수백만마리의 새끼물고기 방류” 「로동신문」, 7월 22일

- 2020년 7월 현재 북한 전역의 강하천과 호수, 저수지, 바다에 약 1억 마리의 새끼 물고기를 방류. ‘단천남천방류어업사업소’와 ‘북청남천방류어업사업소’, ‘성천강방류어업사업소’, ‘신포동골천방류어업사업소’에서는 이백만 마리 이상의 새끼 연어를, ‘리원수산사업소’와 ‘양화수산사업소’, ‘송도원수산사업소’, ‘두포곰등어먹이보장수산사업소’에서는 새끼 가재미를,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새끼 복어를 방류하였음

“종자우레기관리를 과학적으로” 「로동신문」, 7월 22일

- 함경남도 흥원수산사업소에서는 3만여 마리의 새끼 우레를 키워 바다에 방류

“참성게자원증식과 그 전망” 「로동신문」, 7월 22일

- 북한 수역에는 참성게, 말성게, 푸른가시성게, 흰가시성게 등의 성게가 서식하고 있으며, 함경남도 앞바다를 중심으로 동해 수역에서 참성게 자원이 증가하고 있음. 참성게 양식을 위해 양식 적지 조사 및 양식 방법 과학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

“수산자원보호증식을 위한 노력” 「조선중앙통신」, 7월 24일

- 북한의 수산자원 보호 노력 소개. 매년 4월과 7월은 수산자원보호월간으로 지정.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전역에 약 11억 마리의 치어 방류. 양식시설물 제작, 돌넝기, 인공어초 조성사업 등 진행

“광란하는 자연을 길들인 미더운 위훈의 창조자들” 「로동신문」, 7월 30일

- 세찬 파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갈마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 중

“메기양어의 기쁨이 차넘친다” 「로동신문」, 8월 2일

- 평양메기공장에서 메기 양어를 성과적으로 진행 중

“양식면적 확장, 다시마수확 결속” 「로동신문」, 8월 2일

- 청진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 석호바다가양식사업소, 청암바다련어사료보장수산사업소 등 함경북도수산 관리국 산하 수산사업소, 양식사업소에서 다시마 양식에 성과를 내고 있음

“원산양어사업소건설 추진” 「로동신문」, 8월 10일

-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기하여 강원도 원산양어사업소 건설 공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70%

“물고기들에 대한 인공번식기술을 적극 개발” 「통일의 메아리」, 8월 14일

- 수산성 수산연구원에서 가재미 증식을 위한 연구 사업, 명태 자원 증식, 조기 양어 등 다양한 어종의 인공번식기술 개발 중.

“단백질함량이 높은 생물먹이 뽕물등에” 「조선의오늘」, 8월 18일

-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생물먹이인 뽕물등에의 생산방법을 확립하여 전국의 축산, 양어사업소에 전파

“재자원화사업을 중시하여” 「로동신문」, 8월 26일

- 황해남도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당정책을 따라 폐자재를 활용한 양식용 자재 생산 사업의 성과 소개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에서 공장현대화공사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 「메아리」, 8월 28일

-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산하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 현대화 공사 95% 진행. 통합생산체계 구축, 생산공정 무균화와 자동화, 정보화를 통해 생산능력 1.3배 확장 계획

“성능높은 고기배들 건조” 「조선의오늘」, 9월 5일

- 수산성 산하 단천수산사업소, 문덕수산사업소, 청진중앙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 신암수산사업소 등에서 어선 건조 성과 확대

“우리 나라의 토배기물고기 정장어” 「조선중앙통신」, 9월 11일

- 정장어(자치) 양식의 경제성 소개

해운항만

“륙해운성에서 항만수상운수현대화사업에 힘을 집중” 「메아리」, 7월 6일

- 남포항 45톤 컨테이너 기중기 제작 사업을 비롯하여 부두 운영설비 현대화 사업이 적극 추진 중

“세멘트를 실은 짐배 흥남항 출발” 「로동신문」, 9월 16일

- 함경북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시멘트 수천 톤과 자재를 실은 화물선이 흥남을 출발

“세멘트를 실은 짐배 련이어 출항” 「로동신문」, 9월 24일

- 함경북도 태풍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를 실은 여러 척의 화물선들이 흥남항과 원산항에서 출항

[알려 드립니다]

「북한해양수산리뷰」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논문, 칼럼 투고
 - 주제: 북한 해양수산 및 남북 해양수산 협력
 - 분량 및 형식: (소)논문의 경우 A4 10매 내외, 칼럼은 A4 2매 내외 이며, 형식은 자유
(단, 게재 시 연구진과 협의 후 조정)
 -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독자의견 및 Q&A
 - 독자의견: 500자 내외의 「북한해양수산리뷰」에 대한 소감, 자유 형식
 - Q&A: 북한 해양수산 및 해양수산 남북협력에 대한 질문, 형식 및 분량 제한 없음
(연구진에서 질문을 선별해 다음 호에 Q&A 코너를 통해 답변)
 - 게재 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독자 투고 및 의견, 질문 보내실 곳: nkreview@kmi.re.kr